IMF 경고에 놀랐나… 文 "건설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0%로 대폭 하향 조정
文, 올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 "건설투자 확대해야"
전문가들 "文정권 정책전환 없이 경제 활성화 공염불"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인식과 정책전환이 없이 경제 활성화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경제활성화가 될 턱이 있냐는 것이다. 사진은 22일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장을 꺼내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 文,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높여라" 주문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속 저물가' 상황인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등 고용 감소→실업자 증가→가계소득 감소→소비 침체라는 '경제 악순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경제 문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날 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배경에는 IMF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내린 수정전망을 발표한 게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 전문가들 "文정권 정책전환 없이 경제 활성화 공염불"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IR에 참석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보다는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2%보다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등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말들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인식과 정책전환이 없이 경제 활성화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경제활성화가 될 턱이 있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을, 주52시간은 중소기업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대기업을 옥죄는데 도대체 어떤 민간 투자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냐는 반문도 돌아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6년 9월의 우리나라 농림어업 종사자는 142.3만명이었다. 그리고 2019년 9월은 155.3만명으로 13만명이 농업 인구가 늘었다. 무려 9%가 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조업은 이번에도 전년 대비 11만명이 줄었다. 2009-2016년까지 3% 가까이 늘던 것이 이번 정부 들어 계속 감소다"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회복지 분야는 2016년 대비 무려 37만명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의 SNS에 "기술, 시장, 소비자 모두 바뀌고 있는데 문재인정권이 정책 대전환 하지 못하면 자본,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한다. 대량실업을 자초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경제는 협력을 요구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반일 감정 정치쇼는 일자리만 줄일 뿐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치는 적폐"라고 질타했다.

김동욱 기자 east@meconomynews.com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엔에프 코리아	
발행인 이성복	편집인 유지원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진기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암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시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이앤디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유턴 기업' 돌아와도 찬밥 신세

〈표 1〉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단위: 개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
기업수	22	4	12	4	10	13

〈표 2〉

연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캐나다
기업수	60	3	1	1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데스크 구축도 아직… 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
美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법인세 인하 등 파격 혜택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대모비스 중국 공장이 국내 최초 첫 복귀 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반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미국은 같은 기간 2,411개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이 시행된 첫 해인 지난 2014년 22개사를 시작으로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10개사, 2019년(9월말 기준) 13개사로 총 65개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대기업의 국내복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국내 복귀 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추진한 기업의 편의와 혜택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은 아직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다.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국·공유지 사용시 특례를 적용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나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으며, '원스톱 지원 데스크' 구축을 통해 서류지원 절차 등을 간소화시키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도 법사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갈등을 빚어온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며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덕분에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2010년 95개에 그쳤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은 지난해 886개를 기록했다.

유턴기업이 창출한 기업의 고용효과도 한국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애플은 2만2200여개, GM은 1만3000여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 미국의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109개였지만, 한국은 19개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규 조사관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현 기자 ajh@meconomynews.com

韓 6개 vs 日 102개 '세계최고기술' 격차 더 벌어졌다

조선·무선단말 등 추락… "국가기술 경쟁 실패"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분야는 6개, 일본은 102개인 것(2017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13년 20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4년만에 1/3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조사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소분류) 중 한국은 AMOLED 패널과 모듈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수준 보유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다. 한국은 2013년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은 물론 무선단말, 조선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2017년에는 이들 부문은 밀려났다. 기술수준 1위인 미국을 100점으로 산정한 뒤 국가별로 상대적 기술수준을 비교한 점수표를 보면 한국은 2013년 상대 기술수준 점수에서 83.9점, 2015년에는 84점, 2017년에는 83.8점을 받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일본은 2013년 94.9점에서 2017년 96점으로 올랐고, 중국도 같은 기간 71.4점에서 74.9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11점에서 12.2점으로 벌어졌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2.5점에서 8.9점 차이로 감소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96.4), 그린카(90.0), 디자인(84.8), 사물인터넷(82.9)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평가받았고, 임베디드SW(76.6), 바이오의약(77.4),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일본은 지능형 로봇, 그린카, 디스플레이, 화학공정, 세라믹, 뿌리기술 등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결과"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산업기술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meconomynews.com